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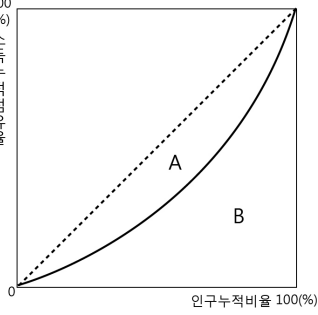
◆ 13년 9월 고1 25~27번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분위 분배율', '로렌즈 곡선', '지니계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 10분위 분배율이란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들까지 일렬로 배열하여 10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때 나온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10분위 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면서도 소득 분배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상위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분배 측정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 로렌즈곡선을 들 수 있다. 로렌즈곡선은 정사각형 상자의 가로축에는 인구누적비율을, 세로축에는 소득누적 점유율을 표시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즈곡선은 그림의 점선



<로렌즈곡선>

과 같이 대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로렌즈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즈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로렌즈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즈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를 비교할 때는 나라의 수만큼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한 좌표 안에 여러 나라의 로렌즈곡선을 그리다 보면 서로 엇갈리면서 교차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는 나라별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된다.

로렌즈곡선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 지니계수이다. 위의 그림처럼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즈곡선을 기준으로 A와 B로 나누어진다. 지니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를 합한 넓이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즈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영(0)에 가까운 값을,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지만, 10분위 분배율과는 반대로 그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듯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상태를 숫자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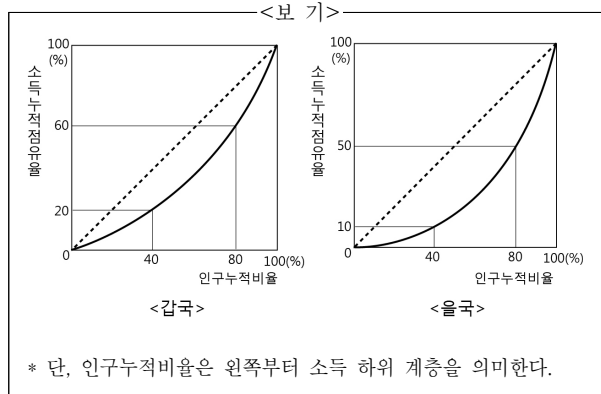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이론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전개하고 있다.
- ④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특정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알 수 있다.
- ③ ㉡이 ㉢보다 여러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를 수치로 비교하기에 유리하다.
- ④ ㉢이 ㉠보다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 ⑤ ㉠의 값이 커질수록 ㉡과 ㉢의 값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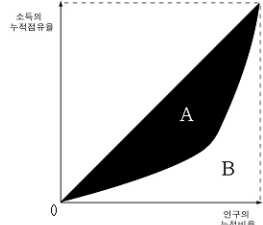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국의 소득 분배가 을국의 소득 분배보다 더 평등하다.
- ② 갑국의 지니계수가 을국의 지니계수보다 1에 더 가깝다.
- ③ 갑국보다 을국의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더 낮다.
- ④ 갑국의 10분위 분배율이 을국의 10분위 분배율보다 더 크다.
- ⑤ 갑국의 경우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 이 값은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낮을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로렌츠 곡선을 들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은 정사각형의 상자 안에 가로축에는 저소득 계층부터 고소득 계층까지를 차례대로 누적한 인구 비율을, 세로축에는 해당 계층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츠 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그리고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한국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사용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지표가 지니 계수이다. 위의 그림에서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A와 B의 두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지니 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를 합한 넓이로 나눈 비율이다. 그러므로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즉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뜻하게 된다.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 제도와 정부 지출을 통한 두 가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조세 제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와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제 등이 있다. 한편,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사회 복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회 복지비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계층의 생계 보조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조세 제도 혹은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정책은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려, 근본 취지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작용은 사람들이 사회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성향이 커지는 복지병(福祉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높은 근로 의욕을 유지하는 동시에, 교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 경험 등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06년 9월 고2 47~50번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 경제에서 소득의 분배는 각 생산 요소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소득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는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배율'과 '로렌츠 곡선', 그리고 '지니 계수' 등의 척도로 측정된다.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누어준 비율을 말한

47.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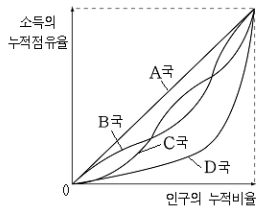
- ①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작용
- ②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 ③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
- ④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⑤ 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양상

4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은/는 (㉡)을/를 토대로 산출된다.

- | | |
|------------|----------|
| ㉠ | ㉡ |
| ① 10분위 분배율 | 로렌츠 곡선 |
| ② 10분위 분배율 | 지니 계수 |
| ③ 로렌츠 곡선 | 지니 계수 |
| ④ 지니 계수 | 로렌츠 곡선 |
| ⑤ 지니 계수 | 10분위 분배율 |

49 위 글을 바탕으로 아래 도표를 해석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소득을 얻고 있겠군.
- ② B국은 C국보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매우 심하겠군.
- ③ C국의 지니 계수는 D국의 지니 계수보다 작겠군.
- ④ D국의 10분위 분배율은 B국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군.
- ⑤ D국은 네 나라 중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군.

50 위 글을 바탕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② 구직자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이 취업할 때까지 가정의 생계를 보장한다.
- ③ 금융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율을 달리하여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
- ④ 정부 산하 기관에 취업 알선 사이트를 만들어 구직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 ⑤ 예비 직장인을 실습 사원으로 채용하여 업무 경험을 쌓게 하는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 10년 3월 고3 23~25번

[23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개인들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려 하며, 시장은 이를 포착하여 알맞은 상품을 제공한다. 생명보험, 암보험 등의 각종 보험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 상품만으로 개인들이 위험에 완전히 대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현재의 욕구를 위한 소비와 미래의 욕구를 위한 저축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욕구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과대평가하는 본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 행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불합리한 존재이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해 버리는 개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대비책이 없어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제도가 사회보험이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총액소득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지급액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사회보험이 민간 보험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또 같은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료도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보험에서 고소득자는 상대적 손실을 입게 되고 저소득자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고용보험에 적용해 보면 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의 보험 상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 위험이 암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은 외환 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업이 증가할수록 나의 실업 확률도 커지는 상호 의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들은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역시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에 맡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그 장치로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민간 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이 성립된다.
- ②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균일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보험이다.
- ③ 사람들이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 ④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 ⑤ 사람들은 노후생활자금 부족,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24.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른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10년 동안 다니던 S씨의 회사도 역시 부도가 났다. 이후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 과도한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던 S씨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몸이 완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S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

- ① S씨의 실직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S씨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③ S씨와 같은 실직자를 위해서 민간 보험회사는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 ④ S씨의 실업은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S씨가 병원 치료 이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 안전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뉴스를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당 △△△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 금액이 사업장의 경우 1억 원, 지역가입자는 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 뉴스 -

- ① <보기>의 법이 적용될 대상자는 저소득자들은 아니군.
- ② 국가가 체납자들에게 가입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 하는군.
- ③ 국가가 민간 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자를 사회보험으로 유도하고 있군.
- ④ <보기>의 상습 체납자는 사회보험 제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셈이군.
- ⑤ <보기>의 상습 체납자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부족하겠군.

◆ 13 수능 39~42번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 결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 ④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 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4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 ② ㉣에서는 연금 기금을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 ③ ㉣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
- ④ ㉤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 ⑤ ㉤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아 누적 체납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 ① (가)를 보니,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 ② (나)를 보니,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군.
- ③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 연금 제도에도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 ④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된 공적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
- ⑤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하겠군.

4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옴.
- ②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③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④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 ⑤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 14 사관학교 1차 A형 19~22번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생활(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공적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이 있다.

㉠ 공적연금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연금은 가입자가 비용은 현재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당장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젊은 시절에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최저생계를 보장해준다. 이 경우 젊었을 때 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방만하게 생활한 사람들의 노후생계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연금 관리자의 입장과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각기 다르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만, 연금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적립방식’은 인구 구조가 변하더라도 국가는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받을 연금과 내는 보험료의 비율이 누구나 일정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 하지만 일정한 기금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 지급이 어렵다.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적립방식’과 달리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제도 도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금액과 지급 받을 연금액의 관계에 따라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방식은 가입자가 일정한 액수나 비율로 보험료를 낼 것만 정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의 액수는 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립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연금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이 손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 또한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 확정기여에 따른 적립금의 화폐가치가 감소되는 위험도 가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확정급여방식은 가입자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따라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나중에 받을 연금을 미리 정하면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의 실패는 연금 관리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손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축을 하느라 적절한 소비를 하지 않으므로
- ②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 ③ 현재의 욕구를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므로
- ④ 미래의 편익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므로
- ⑤ 노후 대비를 국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 공적연금의 재원 충당 방식 중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적립방식	부과방식
① 연금 지급 재원	가입자가 적립한 기금	현재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
② 연금 지급 가능 시기	일정한 기금이 형성된 이후	제도 시작 즉시
③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	세대 간 공평성 미흡	세대 간 공평성 확보
④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 어려움	소득 재분배 가능
⑤ 인구 변동 영향	받지 않음	받음

21.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상황에 대하여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회사는 이번에 공적연금 방식을 준용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회사는 직원들이 퇴직연금 방식을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확정기여방식은 부담금이 공평하게 나뉘지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 ② 확정기여방식은 기금을 운용할 회사의 능력에 따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 ③ 확정기여방식은 기금의 이자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
- ④ 확정급여방식은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 ⑤ 확정급여방식은 투자 수익이 부실할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22. ㉠와 관련하여 맞춤법에 따른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율(規律)
- ② 선율(旋律)
- ③ 자급율(自給率)
- ④ 점유율(占有率)
- ⑤ 백분율(百分率)

◆ 24 사관학교 1차 6~10번

[6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적 연금 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인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을 공적 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소득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그리고 기여금을 납부한 국민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급한다. 이때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 대비 수급하는 연금 총액의 비율을 연금 수익률이라고 한다.

공적 연금 제도의 재정 운영 방식은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자금을 국가가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 구분할 수 있다. ㉡ 적립 방식은 연금 수급자가 경제 활동 시기에 적립한 기여금과 이를 국가가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자금을 조달한다. ㉢ 부과 방식은 연금 지급 시점에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에게 기여금을 부과하여 연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즉 현재의 경제 활동 인구가 납부한 기여금으로 현재 퇴직 상태인 노령 인구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식에서 기여금은 소득 대비 기여금의 비율인 기여율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적립 방식에서는 경제 활동 시기의 소득이 노후로 이전되므로 시간적 소득 재분배가 ㉣ 발생하고, 부과 방식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의 소득이 노령 인구에게 이전되므로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

인구 구조적 요인은 공적 연금의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두 방식 모두에서 연금 지급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출산율의 변화는 부과 방식에만 영향을 준다.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 활동 인구 대비 노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 부과 방식에서는 연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물가나 국민 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도 공적 연금의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연금 수급액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과 방식과 달리 적립 방식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액의 실질적 가치 하락을 보전해 주기 어렵다. 부과 방식에서는 기여율을 높여 현재의 연금 지급액을 높일 수 있지만, 적립 방식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기여율을 올리지 않아도 기여금이 늘어난다. 이때 부과 방식에서는 적립 방식과 달리 현재의 연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적 연금의 재정 운영을 위해 인구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 만약 예측이 실패하여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면, 국가는 ㉥ 기여금 납부를 종료하는 시점이나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를 변경할 수도 있다. 또는 기여율이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여 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때 소득 대체율이란 가입자의 경제 활동 기간 중 월 평균 소득 대비 퇴직 후 월 연금 수급액의 비율이다. 어떤 방법이든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의 불만을 ㉦ 초래하므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여금과 연금을 산정해야 한다.

연금은 소득 비례 부분과 균등 부분으로 ㉧ 구성된 연금 산정 공식에 의해 산정된다. 소득 비례 부분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게 지급하는 금액이고, 균등 부분은 동일한 시기에 퇴직하는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균등 부분을 포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이나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고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이나 연금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빈부 격차가 줄어드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회 보장 제도로서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6. **공적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②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③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 ④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 ⑤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의 연금을 소득에 비례시킨다.

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연금 지급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② ㉠에서는 국가가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연금 지급을 위한 자금에 포함될 수 있다.
- ③ ㉠에서는 국민 소득의 증가가 경제 활동 인구가 납부하는 기여금 총액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 ④ ㉡에서는 기여율 인상을 통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연금액을 높여줄 수 있다.
- ⑤ ㉡에서는 현재의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이 현재의 경제 활동 세대가 납부한 기여금으로 조달된다.

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기여금 납부 개시 연령을 높이면서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기여금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 수급 기간을 줄여서 연금 수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기여율 조정에 따른 가입자의 불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연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기여율은 낮추면서 소득 대체율은 높여서 연금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기여금 납부 기간과 연금 수급 기간을 일치시켜 기여금 총액과 연금 총액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갑국의 공적 연금 제도에서 기여율은 9%이며 연금 산정 공식에는 ‘가입자가 퇴직하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A)과 ‘가입자 개인의 퇴직 전 월 평균 소득’(B)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은 A와 B의 합에 비례한다. 가입자는 퇴직 직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급한다. 현재까지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 이 공적 연금 제도의 모든 가입자는 30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후 퇴직한다.)

- ① 연금 산정 공식에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가 높은 가입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겠군.
- ② A가 B보다 큰 가입자는 자신이 수급하는 연금에서 균등 부분이 소득 비례 부분보다 크겠군.
- ③ A를 ‘가입자가 퇴직하기 직전 9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으로 수정하면 갑국의 연금 지출 총액은 감소하겠군.
- ④ 가입자의 수명과 B의 크기가 무관할 때보다 비례할 때에 수직적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작겠군.
- ⑤ 연금 산정 공식에 B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여금을 더 많이 납부한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겠군.

10.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나눌
- ② ㉡: 일어나고
- ③ ㉢: 내야
- ④ ㉣: 끼치므로
- ⑤ ㉤: 이루어진

◆ 10 경찰대 1차 41~44번

[41-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후의 생계보장을 자발적이며 사적인 해결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처럼 강제적이며 공적인 해결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후의 생계보장이라는 문제에 정부가 간여하게 되면 국민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따라서 정부의 비대화(肥大化)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정부의 강제적이고 공적인 프로그램이 갖는 당위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먼저 왜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해결방식이 필요한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즉, 개인들에게 자신의 노후 생계를 위한 준비를 맡겼을 때 부적절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비자가 모든 경제 행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 즉 ㉡소비자 주권을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이 논리가 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보아 강제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공적 해결방식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제도에 유리한 근거들을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 근거들은 주로 효율성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 우선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적 프로그램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사적 보험보다 유리하다.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여럿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험의 공동부담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은 더 커진다. 따라서 전 국민이 가입대상인 공적 프로그램의 경우 이득이 극대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은 사적 보험보다 더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역선택의 상황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그 결과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불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는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가 노후의 생계와 관련된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적 프로그램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는 보유자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공적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보험료가 보장되고 사회보장세 등을 통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지급준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공적 프로그램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사적 보험보다 더 좋은 노령연금의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게다가 행정비용의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는 행정비용이 관련 예산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명백하게 행정비용으로 드러난 것 이외의 다른 행정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도 4%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행정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공적 프로그램이 사적 보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명목임금이 상승하여 보험료 혹은 사회보장세의 수입도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공적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반면에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는 이러한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해 보험 혜택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효율성의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사적 보험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적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에 뒤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적 프로그램이 갖는 상대적 우위는 부분적으로 상쇄되고 만다.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노후 생활의 보장에 있다.
- ② 공적 프로그램은 사적 프로그램보다 소비자의 만족도를 더 높인다.
- ③ 공적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제적이고 공적이라는 것이다.
- ④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사적 프로그램보다 더 우월하다.
- ⑤ 공적 해결방식이 사적 해결방식보다 낫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42. <보기>에서 ㉠와 ㉡에 각각 관련된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욕구와 자유에 합치되는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ㄴ.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때 현물보조보다는 현금보조가 더 경제적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보조할 때 술이나 도박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는 가급적 쌀과 같은 식량 형태의 현물보조를 실시한다.
 ㄷ.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 줄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이를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
 ㄹ. 정부가 고금리 대부업이 성행하는 것을 규제한다면, 높은 금리를 감수하더라도 급전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온정적 간섭주의 ㉡ 소비자 주권

- | | | |
|---|------|------|
| ① | ㄱ, ㄴ | ㄷ, ㄹ |
| ② | ㄱ, ㄹ | ㄴ, ㄷ |
| ③ | ㄴ, ㄷ | ㄱ, ㄹ |
| ④ | ㄴ, ㄹ | ㄱ, ㄷ |
| ⑤ | ㄷ, ㄹ | ㄱ, ㄴ |

43.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봉장과 과수원이 근처에 있으면 양봉장의 경우 꿀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고 과수원에서는 벌에 의해 수분이 원활히 이루어져 과실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②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는 적절한 수의 소화기를 구입하지 않는다. 소화기의 구입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그로 인한 이득은 주로 보험회사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③ 범람할 위험이 높은 강가에 거주하는 가정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곳에 살면서 훌륭한 경관을 즐기려 한다. 만약 강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더라도 천재지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아이 봐주는 사람은 아이가 그 아이의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도록 버려둔다. 보다 교육적인 놀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이득이지만 아이 봐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힘이 들기 때문이다.
 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보다 그 차의 결점에 대해 더 잘 안다. 일반적으로 나쁜 중고차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중고차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차를 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결만 멀쩡한 중고차를 사게 될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차 사기를 꺼린다.

44. ㉠으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일정액을 돌려받기로 계약한 사적 프로그램이 공적 프로그램보다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 ② 사적 프로그램이 공적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반영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역선택의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공적 프로그램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③ 사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정액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이후에 약정된 일정액을 보장받는 계약이 대부분이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에는 나중에 돌려받게 될 보험혜택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④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공적 프로그램에서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목임금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더라도 실질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보험혜택은 늘어난 보험료로 인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봉급생활자의 형편이 좋아지고 자영업자의 형편은 나빠지게 되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공적 프로그램이 보험혜택의 실질가치라는 측면에서 봉급생활자에게 더 유리하다.